대기업 92곳 내부거래 232조 국외계열사 496조 두배 넘어

공정위, 2024 내부거래 현황

공시집단 내부거래 비중 12.3%
대방건설 33%, 중앙 28%로 높아
총수 지분율과 내부거래비중 비례

지난해 대기업들의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가 국내계열사 대비 두 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수일가 지분이 많을수록 상표권 사용료 수입도 커, 대기업집단 내부거래가 총수일가 중심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92개)의 2024년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수 있는 집단의 국내계열사 내부거래(232조원) 비중은 11.8%였던 반면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496조원) 비중은 25.3%로 집계됐다.

전체 공시집단의 국내 내부거래 비중은 12.3%로 최근 10년간 12% 안팎에서 큰 변동이 없었다. 다만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21.7%)이 상장사(7.4%)의 3배에 육박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집단은 대방건설(32.9%), 중앙(28.3%), 포스코(27.5%) 등이었고, 금액 기준으로는 현대자동차(59.9조원), SK(52.8조원), 삼성(33.7조원) 순이었다. 상위 5개 집단이 전체 내부거래 금액의 65% 이상을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SI 업종(J62)이 5년 연속 내부거래 비중 1~2위(60~63%)를 기록했다. 내부거래 금액 기준으로는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C30)이 43.8조원으로 2020년보다 50% 이상 늘며 1위를 차지했다.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이 비례하는 경향도 재확인됐다. 최근 5년간 총수일가 또는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상승하는 구조가 뚜렷했다. 상위 10대 집단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내부거래 비중은 16.1%로 전체 평균(11.3%)을 크게 상회했다.

상표권 사용료 역시 총수일가 중심 쏠림이 강화됐다. 2024년 상표권 유상사용 집단은 72개로 5년 연속 증가했고, 이 중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회사가 수취한 사용료가 총액의 81.8%에 달했다. 특히 연간 1000억원 이상 상표권 수취 집단이 LG·SK·한화·CJ·포스코 등 7곳이나 됐다. CJ는 매출 대비 상표권 수취 비중이 54.8%로 가장 높았다.

자금·자산 거래에서도 계열 간 대규모 내부거래가 이어졌다. 국내 계열사 간 차입금 규모는 34.4조원, 유가증권 내부거래는 206.8조원에 달했다. 삼성, 미래에셋, SK의 유가증권 내부거래가 두드러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크다고 해서 부당 내부거래 소지가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총수 있는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10년째 감소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내부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당한 내부거래 발생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고, 주요 내부거래 현황을 상세하게 공개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적 감시와 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집단 자발적으로 내부거래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농협네트웍스와 충주시가 '지역경제 및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농협중앙회

농협네트웍스-충주시, 농촌 활성화 맞손

농촌체험관광 상품 개발 등 협력

농협네트웍스와 충북 충주시가 '지역경제 및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3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일 충주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양측은 ▲농촌체험관광 상품 개발 및 운영 ▲도시민 체험비 지원 ▲지역 네트워크 공유 등의 분야에서 상호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간다는 데 합의했다.

행사에는 송병환 농협네트웍스 대표이사와 조길형 충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송병환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충주시 농촌경제와 도시민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도시민에게 농촌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촉구하며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협네트웍스는 국내 유일의 농업·농촌전문여행사이다. 지난 13년간 지자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약 48만 명의 도시민을 농촌 지역으로 송객하며,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농협의 공익적 역할을 위해 앞장서 왔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천원 아침밥' 확대

농식품부, 새 정부 출범 6개월 성과
내년 10개 지역 '농어촌 기본소득'
빈집은행 플랫폼 구축, 거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6개월간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및 쌀값 안정 등 농업·농촌 분야에서 정책 혁신 성과를 창출해 왔다고 3일 밝혔다.

특히 과감한 혁신 기조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초점을두고 있다.

그간 농식품부 장관과 차관이 농업 현장을 89차례 방문하고, K-농정협의체 등을 통해 농업인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 왔다.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은 내년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선도모델 구축을 위해 7개 지역을 선정한 데 이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3곳이 추가돼, 총 10개 지역에서 내년부터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은행골식당에서 학생들과 함께 '천원의 아침밥'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농촌 빈집 정책도 본격화했다. 빈집 철거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농식품부로 이관되면서 농촌 빈집 관리를 전담한다. 농촌 빈집은행 플랫폼('그린대로')을 구축해 실제 거래가 이뤄지도록 지원 중이다. 체계적인 정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또 대여 방식의 정부양곡 공급과 시장격리를 병행해 올해 수확기 쌀값을 관리 중이다. 쌀 소비 감소 대응을 위해 대학생 대상의 '천원의 아침밥'을 10월부터 산단 근로자까지 확대했다.

추석·김장철 등 수요 집중기에 공급 확대와 할인지원(추석 500억 원·김장철 300억 원)을 시행해, 추석 상차림 비용은 전년대비 1.8%, 김장비용은 5.6% 낮췄다.

아울러 공공배달앱 활성화와 외식 소비쿠폰 지급으로 외식업체의 중개수수료 351억 원 절감 효과를 냈다.

올해 9월에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온라인도매시장의 누적 거래액이 1조 원을 넘어서는 등 유통구조 혁신을 이어갔다. 생산자단체 중심의 계란가격 조사 체계를 투명하게 개선하기도 했다.

올해 기본직불금 지급 규모는 2조 3843억 원으로 역대 최대다.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 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필수농자재법'도 제정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농식품부-aT, 中서 'K-푸드 홍보관' 운영

산둥성 '한중 우호주간' 맞아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중국 칭다오에서 유통매장 올레(Ole)와 연계한 '한국식품절' 판촉전 및 완상청 내 'K-푸드 홍보관' 운영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3일 aT에 따르면 이 행사는 주중한국대사관이 6년 만에 재개한 산둥성 '한중 우호주간(11월 19~22일)'을 맞아 개최됐다.

올레 유통매장은 중국 화룬완자 그룹의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삼, 과자, 주류, 유제품 등 인기 K-푸드를 포함해 전세계 수입식품을 함께 취급한다. 중간브랜드인 Blt매장까지 합산하면 중국 전역에 122개 매장이 분포돼 있다.

aT는 그중 111개 매장과 협업해 '한국식품절' 할인 행사를 11월 한 달간 상시로 진행했다. 특히, 한중 우호주간에는 칭다오시 최대 쇼핑몰 완상청 소재의 올레 매장에 K-푸드 특별전시관을 설치했다.

홍보관에서는 라면과 음료, 견과류 조제품, 장류, 주류 등 품목을 수출하는 국내 식품기업 41개사의 72개 제품을 선보였다. 동시에 중국 주요 온라인몰(티몰, 징동, 더우인)에서 상설 운영중인 '한국식품관'에 QR코드로 접속해 즉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O2O 판촉을 진행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청년층, 수도권 가면 소득 20% 증가

데이터처, 청년 소득변화
1년내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
소득 1분위 31%→21% 급감소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이동한 경우 소득이 20% 넘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층은 소득 증가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층 가운데 소득 1분위 비중이 1년 사이 30.7%에서 21.0%로 크게 줄었다. 이는 수도권 이동이 저소득 청년들에게 '소득계층의 이동 통로'로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인구이동에 따른 소득변화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2023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소득자는 18만8000명으로 이중 청년층은 13만1000명(69.9%)을 차지했다.

이 중 기존 거주 권역을 벗어나 다른 권역으로 이동한 청년은 31만8000명(63.9%)에 달했다. 여기서 권역간 이동이란 5극3특 권역 경계를 넘어 이동한 경우를 뜻한다.

권역 간 청년 이동률은 남성(3.2%)로 여성(2.9%)보다 0.3%포인트(p) 높았다. 다만 수도권으로의 이동률은 여성(1.3%)이 남성(1.2%)보다 0.1%p 높았다.

권역 간 순이동률을 보면, 수도권(0.5%)과 충청권(0.4%)은 빠져나가는 청년보다 들어오는 청년이 더 많았고, 대경권(-1.1%)과 동남권(-1.1%), 서남권(-1.0%)은 더 많은 청년이 유출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기후부, 오늘 '배출권거래제' 민관 간담회

제4기 할당계획 준비상황 등 공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민관 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달 4일 서울 강남구 토즈모임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제4기 할당계획 준비상황 공유 및 기업 의견 수렴 등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할당대상업체들은 내년부터 제4기 할당계획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 받고 제도를 이행하게 된다.

이번 간담회에선 정부 및 주요 업종별 협회·기업 및 발전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 제4기 할당계획 후속조치 과제 및 기업지원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업종별 협회, 주요 기업, 발전사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또 제4기 할당계획부터 도입하는 '한국형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K-MSR)'와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 연구팀이 유럽, 미국 등 해외 제도 운영 현황과 국내 적용 방안에 대해 소개한다.

/세종=김연세 기자